

# 비판적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본 한국 난민 문제

## 감응적 세계시민교육의 모색

Korean Refugee Narratives and Discourse from a Critical Posthumanist Perspective:  
Toward Affectiv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천수연<sup>••</sup>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난민 문제를 비판적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고찰하고, 인간중심적 세계시민교육의 한계를 검토한 뒤 그 대안으로 감응적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안녕, 한국!』(난민인권센터, 2018)에 수록된 난민 당사자의 서사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유튜브에 게시된 난민 관련 영상 및 댓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난민 서사에서는 행정 문서, 통역, 공간적 통제 등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난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유튜브 담론에서는 난민을 위협과 범죄의 대상으로 재현하거나, 거부와 배제, 종교·문화적 타자화, 경제적 부담을 강조하는 담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여 인권과 연대를 강조하는 대항 담론도 함께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교육적 접근을 확장하기 위해, 난민을 둘러싼 제도와 담론을 인식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성찰하는 감응적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 교육 실천 방향으로 난민 서사를 활용한 경계 재구성, 혐오 담론의 비판적 분석, 감응적 성찰 중심의 학습 평가를 제시하였다.

**핵심어** 난민,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세계시민교육, 감응적 교육, 비인간 행위자, 관계적 시민성, 타자화

- 차례**
1. 서론
  2.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3. 한국 난민 현황과 담론
  4. 비판적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본 세계시민교육의 재사유
  5. 결론

## 1. 서론

21세기 세계화는 인류의 이동과 상호 교류를 가속화시켰지만, 그 이면에는 국경과 경계, 타자에 대한 배제의 문제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난민 문제도 그중 하나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1951년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유엔난민 기구는 난민뿐만 아니라 비호신청자, 무국적자 등을 비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제3회 한국학협동과정 연구발표회’(2026.5.8)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객원교수

호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sup>1</sup>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강제실향민(강제이주민 포함)은 약 1억 2,32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등 세계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또한 비호신청자는 약 840만 명에 달한다.<sup>2</sup> 전 세계적으로 무력충돌, 정치적 불안, 경제 위기 등이 심화되면서 난민을 비롯한 강제실향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생존 공간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난민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함께 직면해야 할 보편적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몇 년간 제주 예멘 난민 사태<sup>3</sup>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문제<sup>4</sup>로 인해 난민 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난민 문제는 더 이상 국경 밖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의 중요한 사회·교육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주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었고 수용 반대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sup>5</sup> 한국의 난민 담론은 여전히 ‘수용’

과 ‘통제’, ‘인도주의’와 ‘위협’이라는 이중적 프레임 속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구조는 국내 다문화주의 담론이 지닌 구조적 한계와도 연결된다. 제도적으로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사회적 실천과 정책의 방향은 여전히 ‘한국인 중심의 통합’과 ‘동화주의적 접근’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난민 문제는 단순한 정책적·행정적 과제를 넘어, 함께 살아갈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난민을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교육적 접근을 요청한다. 실제로 난민 문제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공감, 공동의 책임, 다양성 존중, 지속가능한 공존과 같은 핵심 가치와 결합될 때 그 교육적 의미가 더욱 구체화된다.<sup>6</sup>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은 인간·비인간·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보편적 인권, 도덕성, 인간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인간중심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으며, 난민을 둘러싼 복합적 권력관계와 구조적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기존 난민 연구를 살펴보면 난민법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다루는 법·정책·인권 영역<sup>7</sup>과 언론의 난민 재현 방식 및 온라인 공론장의 혐오 담론 재생산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담론·미디어 영역<sup>8</sup>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학적 접근으로는 인권교육·다문화교육·한국어교육 등이

1 보통 난민과 비호대상자를 같은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분명 다르다. 비호대상자, 비호신청자는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말하지만 난민 신청이 결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국가 비호체제는 비호신청자 중 어떤 사람들이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적절한 과정을 통해 난민이 아니거나, 어떠한 형태의 국제적 보호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된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 또 다른 보호 대상인 무국적자는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자국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처한 개인을 말한다. 때로는 무국적자가 난민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범주는 서로 다르다.

2 <https://www.unhcr.org/global-trends-report-2024?utm>

3 2016~2018년 사이 예멘 출신 난민 약 500명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건.

4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난민 사태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같은 해 3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인도적 체류 자격을 부여함.

5 『제주매일』, 2018.6.18.

6 Global citizenship and peace education.  
<https://www.unesco.org/en/global-citizenship-peace-education/need-know?>

7 신지원, 「‘이주-비호의 연계성’ 담론과 난민보호 위기에 관한 정책적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 15(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417~457쪽; 임보미·김치정, 「난민 정책과 난민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사회와 다문화』 14(3),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24, 1~26쪽 등.

8 신예원·마동훈, 「국내 미디어에 재현된 ‘예멘 난민’의 양면」, 『미디어 경제와 문화』 17(2), SBS, 2019, 31~80쪽; 주재원·임이삭, 「매개된 배타적 담론과 혐오적 공론장의 재생산」, 『지역과 세계』 46(1),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2022, 97~134쪽; 백일순, 「이동통치의 관점에서 본 난민 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 역사 지리』 34(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22, 151~169쪽.

있으며, 대부분 난민을 수동적 타자로 위치시키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sup>9</sup>

한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연구는 2015년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의제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sup>10</sup> 초기 연구는 세계시민성의 개념을 규명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었으며,<sup>11</sup> 이후 교수학습 모델 개발, 교과서 분석, 역량 측정으로 외연을 확장해 왔다. 기존의 세계시민교육·인권교육·다문화교육은 구체적 딜레마 상황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선의가 구조적 평등성 인식이나 권력관계 비판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sup>12</sup> 이러한 비판적 성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인간 주체의 의식 확장과 권리 재구성이라는 인간중심적 프레임 안에 머물며, 세계시민성 개념 자체에 내재한 존재론적 경계 짓기를 문제화하지 않는다.<sup>13</sup> 따라서 기존 난민 문제에 대한 연구 또한 법·제도·담론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육학적 접근은 인도주의적 인간중심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연구는 기존 교육의 한계를 진단하고 변혁적 시민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비판의 언어 자체가 인간중심적 권리 논리에 머물러 있

다. 이에 비판적 포스트휴먼 이론을 교육학에 적용한 연구<sup>14</sup>가 축적되고 있으나, 이를 한국 사회의 난민 문제와 연결하는 통합적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성 자체를 존재론적으로 문제화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그 가능성을 비판적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찾고자 한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근대 인문주의가 전제해 온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인간·비인간·환경이 상호의존적 관계망 속에서 존재함을 강조하는 이론적 접근이다.<sup>15</sup>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난민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제도적 배제와 사회적 경계를 드러내는 관계적 주체로 이해하고, 기존 세계시민교육의 인간중심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두 가지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첫째,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에세이집 『안녕, 한국!』<sup>16</sup>에 수록된 난민 서사이며, 둘째, 유튜브 영상과 댓글에 나타난 난민 관련 담론이다. 두 자료는 난민 당사자가 경험하는 제도적·일상적 배제와 한국 사회에서 난민이 재현되고 타자화되는 방식을 서로 다른 위치에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교차하여 살펴봄으로써 난민을 둘러싼 인간·제도·언어·디지털 플랫폼의 관계적 작동을 분석하고, 비판적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9 이채영, 「국내 난민교육 이슈 분석과 난민 정책적 시사점 탐색」, 『다문화사회연구』 17(1),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2024, 69~95쪽.

10 김영환·김선정, 「국내 세계시민교육 연구 동향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교육』 11(1),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2026, 83~103쪽.

11 김진희, 「Post 2015 맥락의 세계시민교육 담론 동향과 쟁점 분석」, 『시민교육연구』 47(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5, 59~88쪽; 이정우, 「사회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제6차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68,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2017, 57~88쪽.

12 허수미, 「세계시민교육으로서 사회과교육의 역할과 수업개선 방안」, 『사회과수업연구』 6(2),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18, 19~38쪽.

13 박순용, 「난민문제를 통해서 본 세계시민교육의 과제에 대한 고찰」,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15, 77~99쪽; 송원섭, 「순진한 도덕적 호소 너머의 세계시민교육: 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개념 기반에 따른 지리교육의 방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4), 한국지역지리학회, 2025, 855~878쪽; 김지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경험」, 『교육문화연구』 31(3), 인하대 교육연구소, 2025, 121~146쪽.

14 정윤경, 「교육학의 포스트휴머니즘 수용과 포스트휴먼 감응교육 탐색」, 『교육철학연구』 42(4), 한국교육철학학회, 2020, 187~216쪽; 허창수, 「비판적 포스트휴먼과 브리콜라주 텍스트로서 한국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운영 방향 논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2), 한국콘텐츠학회, 2024, 430~441쪽.

15 Braidotti, R.,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Haraway, D.,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16 난민인권센터, 『안녕, 한국!: 한국거주 난민 에세이집』, 난민인권센터, 2018.

첫째, 한국의 난민 제도와 난민 당사자의 서사에는 난민을 배제하고 타자화하는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미디어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난민 담론은 어떠한 언어적·정동적 특성을 보이며, 난민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셋째, 비판적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기존 세계시민교육의 한계는 무엇이며, 새로운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 2.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 2.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난민을 둘러싼 제도적·일상적 배제 경험과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형성되는 난민 담론을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두 가지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자료는 난민인권센터가 2018년에 발간한 에세이집 『안녕, 한국!』에 수록된 난민 당사자의 서사이다. 이 자료에는 한국에서 난민 신청과 심사, 체류 및 정착 과정을 경험한 난민들의 진술이 수록되어 있으며, 행정 절차와 공간, 언어, 담당자와의 상호작용, 일상적 편견과 차별이 난민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에세이집 전체를 검토한 후, 난민의 제도적·사회적 배제 경험 및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을 분석 자료로 추출하였다. 두 번째 자료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유튜브에 게시된 난민 관련 영상과 댓글이다. 2018년은 제주 예멘 난민 문제가 한국 사회의 주요 공적 의제로 부상하고 온라인상에서 난민 수용을 둘러싼 담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라는 점에서 분석의 시작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자료는 NetMiner를 이용하여 ‘난민’을 검색어로 영상과 댓글을 직접 수집하였

으며, 최종 수집 자료는 영상 1,297편과 해당 영상에 작성된 댓글 33,121건이다.<sup>17</sup>

두 자료는 서로 다른 담론적 위치를 보여준다. 『안녕, 한국!』은 난민 당사자가 한국의 제도와 사회를 경험하고 서술한 내부적 목소리를 담고 있는 반면, 유튜브 영상과 댓글은 한국 사회에서 난민이 호명되고 분류되며 평가되는 외부적 시선을 보여준다.

### 2.2. 분석 절차

『안녕, 한국!』의 난민 서사는 비판적 포스트휴먼 관점에 기반한 질적 주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에세이집 전체를 반복하여 검토하면서 난민 신청과 심사, 체류 및 정착, 일상적 관계에서 경험한 배제와 차별에 관한 진술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난민들의 경험 서사를 ① 행정 절차와 심사 과정, ② 언어의 번역과 기록, ③ 공간적 통제와 이동 제한, ④ 담당자와의 상호작용, ⑤ 국적·인종·종교에 따른 일상적 차별로 구분하였다. 이후 이러한 경험이 개별 인간의 태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서류, 심사 절차, 통역과 기록, 출입국 공간 등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유튜브 자료 분석은 자료 정제, 키워드 빈도 분석, 원문 맥락 검토의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수집된 영상과 댓글 가운데 전체 텍스트가 확인되는 영상 1,232편과 댓글 33,049건을 텍스트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NetMiner의 형태소 분석을 통해 일반명사와 고유명사를 추출하고, 총 12,447개의 명사별 출현 빈도를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난민 담론의 의미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어려운 일반어, 한 글자 명사, 검색어인 ‘난민’, 분석 맥락과 관련성이 낮은 표현을 불용어로 처리

<sup>17</sup> 검색 및 자료 수집은 2026년 4월 25일에 이루어졌다. 수집 자료에는 영상 제목과 전체 텍스트, 댓글 원문, 게시 시각, 영상과 댓글 간 연결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였다.

이후 정제된 주요 키워드를 의미적 연관성과 담론적 기능에 따라 잠정적으로 범주화하고, NetMiner의 단어-영상 및 단어-댓글 연결망을 이용하여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원문을 다시 확인하였다. 동일한 단어라 할지라도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 그러한 인식을 비판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등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단어가 사용된 문맥과 발화의 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위협·범죄화, 거부·배제, 종교·문화적 타자화, 경제적 부담, 비인간화, 인도주의·연대 등의 담론 범주를 구성하였다.<sup>18</sup> 이러한 분석 기준에 따라 개별 표현을 단순히 긍정 또는 부정으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분석 결과 역시 유튜브 이용자 전체나 한국 사회 전체의 난민 인식으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만으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난민 관련 담론에 미친 영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알고리즘에 관한 논의는 특정한 표현과 감정이 플랫폼 내에서 축적되고 가시화되는 환경을 설명하는 데 한정하였다.

### 3. 한국 난민 현황과 담론

본 장에서는 한국의 난민 수용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난민 당사자의 서사와 미디어 담론에 나타난 난민 키워드 분석을 통해 난민의 위치를 살펴본다. 먼저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난민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안녕, 한국!』에 수록된 난민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행정 절차와 공간, 언어, 담당자와의 상호작용이 난민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

입하는지 살펴본다. 이어 유튜브 영상과 댓글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와 원문의 맥락을 분석하여 난민에 관한 위협·범죄화, 거부·배제, 종교·문화적 타자화, 경제적 부담, 비인간화, 인도주의·연대 담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난민을 둘러싼 제도, 인간, 언어, 공간, 디지털미디어가 상호작용하며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계를 구성하는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 3.1. 한국 난민 수용 현황과 제도적 한계

한국은 1992년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난민 보호의 의무를 지닌 국가가 되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 사유를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가족 결합, 기타, 내전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난민 인정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신청자 대비 인정 비율이 시행 이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은 난민법의 제정과 시행이 반드시 실질적인 난민 보호의 확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sup>19</sup>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난민 신청 건수는 18,838건으로 난민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3% 감소한 18,336건이 접수되었으며, 1994년부터 2024년까지의 누적 신청 건수는 122,096건에 이른다. 반면 2024년에 새롭게 난민

<sup>18</sup> 유튜브 댓글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이지만,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댓글 작성자의 계정명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표적인 댓글 사례는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식별화하거나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sup>19</sup> 이민정책연구원(MRTC) 보고서 「South Korea's Refugee Policy and Implementation Since the 2013 Refugee Act」(Publication No. 2017-17).

으로 인정된 사람은 105명이었으며, 2024년 말 기준 누적 난민 인정자는 1,544명으로 집계되었다. 법무부 심사가 종결된 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누적 난민 인정률은 약 2.7%에 그쳤다.<sup>20</sup>

또한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즉 인도적 체류자는 2024년 말 기준 누적 2,696명이다.<sup>21</sup> 인도적 체류 허가는 별도로 신청하는 지위가 아니라 난민 불인정 결정 이후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부여된다.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일정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지위와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가족 결합, 사회보장 및 장기적인 체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제한을 받으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안정한 체류 조건에 놓이게 된다. 이는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는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제도적 모순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와 제도적 조건을 통해 난민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의 범위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장기간의 심사 절차와 낮은 난민 인정률, 난민 지위와 인도적 체류 지위 사이의 권리 격차는 한국의 난민제도가 보호의 기능과 함께 신청자를 선별하고 관리하는 통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난민제도의 이러한 특성은 법률과 통계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난민 인정 여부는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진술과 증빙 자료, 통역과 기록, 담당자의 판단, 행정 절차와 정보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난민 심사는 인간 심사관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문서와 시스템이 자동으로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도 아니다. 인간 행위자와 문서 양식, 심사 절차, 통역, 데이터 입력 시스템 등의 비인간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진술이 기록되고 해석되며,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행정 판단이 구성된다.

이와 같이 비인간 행위자의 작용에 주목하는 것이 심사 담당자나 정책 결정자의 책임을 약화하는 것은 아니다. 문서 양식과 심사 절차, 데이터 시스템은 인간에 의해 설계되고 운영되지만, 일단 제도 안에 배치된 이후에는 신청자의 진술을 분류하고 기록하며 심사의 방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담당자(인간) 역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 시스템은 인간의 책임을 대신하는 주체가 아니라, 담당자(인간)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

난민 심사의 이러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관계 작동 방식은 난민인권센터가 발간한 한국 거주 난민 에세이집 『안녕, 한국!』에 수록된 당사자들의 서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에세이에 나타난 난민 심사 과정은 행정 절차가 신청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고 전달하는 중립적인 과정이 아니라, 진술의 일부가 선택되고 번역되며 기록되는 과정임을 드러낸다. 여러 난민은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자신의 말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거나, 담당자의 판단과 기록 방식에 따라 진술의 일부가 축소되거나 변형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밝힌다.

<sup>20</sup> 해당 연도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반드시 같은 연도에 신청한 것은 아니므로, 연도별 신청 건수와 인정자 수를 단순히 나누어 인정률을 산정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누적 신청 건수를 분모로 별도의 인정률을 계산하지 않고, 법무부가 심사 종결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식 누적 난민 인정률을 활용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 신청 및 심사 통계」,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8/477062/download.do> (검색일: 2026.7.10).

<sup>21</sup> 2024년 12월 31일 기준 법무부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 <https://www.moj.go.kr/moj/2417/subview.do?>

당자의 태도는 매우 무례합니다. 저와 저의 아내가 인터뷰를 할 때도 상대 담당자는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말을 아무렇게나 꾸며대 인도적체류 비자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 저희 변호사는 법정에서 저희를 변호하기 위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빅탐)<sup>22</sup>

빅탐의 진술은 난민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발화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질문과 기록, 통역 및 행정 문서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말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거나 진술의 일부가 누락될 경우, 난민의 구체적인 경험은 심사에 필요한 행정 정보로 축소될 수 있다. 특히 담당자가 진술을 듣고 기록하는 방식은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행위자의 판단과 책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점이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하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은 매우 불친절했고 그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할 때까지 아무런 설명 없이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의 이민 및 난민 정책을 실제로는 ‘진짜’ 난민들을 거부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무부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흐만)<sup>23</sup>

“서울출입국 난민과 직원들은 친절하지 않았고 기다리

는 줄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 그 직원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압둘아베드)<sup>24</sup>

라흐만과 압둘아베드의 진술은 신청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조력을 받지 못한 난민이 담당자와 행정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대칭적 관계를 보여준다. 이들이 경험한 당혹감과 모멸감은 담당자의 불친절한 태도라는 개인적 차원과 장시간의 대기, 제한된 안내, 복잡한 신청 절차라는 제도적 차원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난민의 감정은 개인의 주관적 반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자와 행정 절차, 공간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관계적 경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난민들의 송환대기실에서의 경험은 행정 절차의 비인간성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들은 5일 동안 아무런 음식을 주지 않았을 때 저희의 체력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저희는 송환대기실에서 만난 사람들이 준 약간의 음식으로 닻새를 겨우 버텼습니다. 출입국지원은 항상 우리를 강제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협박하며 많은 압박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대디)<sup>25</sup>

대디의 진술은 송환대기실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출국을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라 난민의 이동과 생활을 제한하는 통제의 환경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밀폐된 공간, 제한된 음식과 이동, 감독 장치와 행정 규칙은 난민의 신체와 행동을 제약하는 물질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음식 제공과 이동을 제한하고 강제송환의 가능성을 고지하는 과정에는 담당자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판단과 조치가 수반된다. 따라서

22 난민인권센터, 앞의 책, 59쪽.

23 위의 책, 124쪽.

24 위의 책, 134쪽.

25 위의 책, 57쪽.



송환대기실에서의 경험은 인간 행위자의 결정과 공간, 규칙, 감독 장치 등의 비인간 행위자가 결합하여 난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사들은 난민 심사가 신청자의 진술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판단하는 중립적인 절차가 아니라, 담당자와 행정기관, 문서 양식, 통역과 기록, 물리적 공간 및 절차적 규범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난민의 구체적인 경험은 심사에 필요한 정보로 분류되고 행정 문서의 형식에 맞게 재구성된다. 그 결과 난민은 고유한 삶과 서사를 지닌 주체라기보다 심사와 관리의 대상으로 위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적 분석은 난민 심사의 결과를 특정 담당자 개인의 태도나 행정 시스템만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제도의 설계와 운영, 구체적인 판단에 참여한 인간 행위자의 책임을 함께 묻게 한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난민 심사 과정에만 머물지 않고 체류와 취업, 사회적 관계 등 일상생활 전반으로 이어진다.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제한된 권리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일상에서도 거부와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안녕, 한국!』에 수록된 난민들의 진술은 제도적 지위의 불안정성이 노동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배제 경험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산다는 건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 마냥 거절당하는 일의 연속이라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차별적인 행동과 거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수)<sup>26</sup>

“‘불법’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공장 안에 들어서면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간주하고 여러 형태의 학대를 감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체적 학대도 일어납니다.” (안젤로)<sup>27</sup>

수와 안젤로의 진술은 제도적 배제가 법적 지위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노동과 사회적 관계, 일상적인 권리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안정한 체류 지위는 난민과 난민신청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들을 사회 구성원이라기보다 임시적이고 조건부적인 존재로 위치시킬 수 있다. 이들의 배제 경험은 법적 지위, 취업 조건, 사업장의 권력관계 및 사회적 편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난민들의 서사는 한국의 난민제도가 법적으로는 난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신청자를 심사하고 분류하며 관리하는 행정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난민의 경험과 진술은 담당자의 질문과 판단, 통역과 기록, 문서 양식과 심사 절차를 거쳐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난민의 구체적인 삶과 경험은 제도적 기준에 맞게 선택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 난민은 고유한 서사를 지닌 주체보다 심사와 관리의 대상으로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난민제도의 개선은 법률이나 행정 절차를 형식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심사 과정에서 난민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고 해석되는지, 담당자의 판단과 책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공간과 문서 및 정보 시스템이 난민의 권리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한국 사회에서 난민을 위협과 부담의 대상으로 구성해 온 사회적·미디어 담론과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6 위의 책, 80쪽.

27 위의 책, 18쪽.



### 3.2. 사회·미디어 담론 속 난민 인식

한국 사회의 난민 인식은 법과 제도의 영향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와 대중매체,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다양한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일부 주요 언론은 ‘국민 불안’, ‘가짜 난민’, ‘치안 위협’ 등의 위기 중심적 프레임을 통해 난민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보도는 난민을 사회적 위협이나 검증의 대상으로 위치시키고, 난민 개인의 삶과 이동 배경보다 집단적 위협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sup>28</sup> 물론 모든 언론 보도가 난민을 부정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며, 난민의 인권과 보호 필요성, 한국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도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기와 불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보도가 반복될 경우, 난민은 보호와 권리의 주체라기보다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외부 집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담론에서 난민의 국적과 종교, 체류 지위는 개인의 다양한 삶을 설명하는 정보라기보다 이들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녕, 한국!』에 수록된 난민들의 서사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맞닿아 있는 일상적 배제 경험을 보여준다. 난민 당사자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국적과 인종, 난민이라는 지위로 인해 타인의 시선과 거부를 경험하였다고 밝힌다.

“저희가 처한 망명이라는 무덤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이지요.”

“대부분 제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침입자인 것처럼 느낍니다. 욕설이나 ‘이 나라의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 비난을 받지 않고 지나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안젤로)<sup>29</sup>

“도대체 무엇이 한 인종은 우월하고 다른 인종은 열등하

게 만드는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안젤로)<sup>30</sup>

이와 같은 안젤로의 진술은 난민을 둘러싼 불안과 의심의 담론이 언론과 제도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적 관계에서 낙인과 배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제는 난민이라는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인종과 피부색, 국적 등 가시적인 차이를 근거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피부색으로 인한 노골적인 차별 경험을 이야기한다.

“제가 급기야 ‘저한테 뭐 잘못된 게 있나요? Is there anything wrong about me?’라고 묻자 뒤에서 ‘흑인 Black, 흑인 Black’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있으며 그것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sup>31</sup>

놀라운 은총의 진술은 난민이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가시적 차이를 통해 인종화된 타자로 호명되고 배제되는 경험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별을 언론이나 온라인 담론의 직접적인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난민과 특정 인종을 낮설고 위협적인 존재로 재현하는 사회적 담론은 그들을 향한 일상적 거부와 차별적 인식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6개월의 시간이 그랬다 ... 작년에 외국인보호소에 가게 되었다 ... 감방 안에서는 인간 본성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그들은 언제나 남들을 놀리고 비웃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 하루는 그 중 몇몇이 내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었다. 나는 방글라데시 출신이라 대답했지만, 그 사람들은 방글라데시를 몰랐다 ...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이름은 처음 들어봤다면서 낄낄대고 웃었다.”

28 신예원·마동훈, 앞의 논문, 51~52쪽.

29 난민인권센터, 앞의 책, 18쪽.

30 위의 책, 84쪽.

31 위의 책, 52쪽.

“내가 난민이라는 것을 듣자 그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고 무시했다 ... 그들은 갖가지 언어로 나를 모욕하면서 내게 그 말의 뜻을 이해시키려고 했다. 수없이 모욕을 당하면서 나는 정말 많이 울었다.”

“전디다 못해 불만을 터뜨리자 그 남자는 욕을 해댔다. 그리고 그 남자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 욕을 하고 비웃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새로운 수감자 앞에서 나의 정체를 바꿨다 ... 내가 살인자라고 말하자 새로운 수감자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자말)<sup>32</sup>

난민에 대한 배제와 차별은 개인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 구성원의 일상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항상 사람들은 예외 없이 우리 가족을 쓰레기로 취급하고 쓸모없다고 여기며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라)<sup>33</sup>

배제와 차별은 피부색과 같은 외형적 차이뿐만 아니라 국적을 기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저의 국적을 알게 되면 대개 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니다.” (베츠너트)<sup>34</sup>

베츠너트는 자신의 국적이 알려진 이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험을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전한다. 이는 국적이 단순한 개인정보에 머무르지 않고, 난민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난민을 향한 불신과 거부의 표현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디지털 공간에서는 해시태그와 댓글, 이미지 밈(meme) 등을 통해 난민을

위협·부담·갈등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담론이 축적되고 공유된다. 동시에 난민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거나 인권과 연대를 강조하는 발화도 함께 나타난다.

본 연구는 미디어 상의 난민 관련 담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와 의미 범주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난민’을 키워드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게시된 영상 1,297편과 해당 영상에 작성된 댓글 33,121건을 검색하였다. 이에 NetMiner를 활용하여 영상 관련 텍스트와 댓글에 나타난 일반명사와 고유명사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고, 주요 키워드가 사용된 원문의 맥락을 함께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난민 관련 담론은 위협·범죄화, 거부·배제, 종교·문화적 타자화, 경제적 부담, 비인간화, 인도주의·연대 등으로 범주화해 볼 수 있었다. 주요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주요 발화 맥락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유튜브 난민 관련 담론의 주요 키워드와 의미 범주<sup>35</sup>

| 담론 범주      | 주요 키워드 및 출현 빈도                                                                                    | 주요 발화 맥락                                             |
|------------|---------------------------------------------------------------------------------------------------|------------------------------------------------------|
| 위협·범죄화     | 추방 1,242회, 범죄 827회, 테러 441회, 위협 374회, 가짜 278회, 위협 200회                                            |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나 테러의 위협을 지닌 존재로 규정하거나 난민 지위의 진정성을 의심함    |
| 거부·배제      | 수용 1,089회, 반대 839회, 불법 561회, 거부 276회, 혐오 153회, 불안 149회, 배척 51회                                    | 난민 수용을 반대하거나 난민과 불법 체류자를 동일시하고 공동체 밖으로 배제할 것을 요구함    |
| 종교·문화적 타자화 | 이슬람 1,800회, 종교 1,058회, 문화 1,055회, 무슬림 903회                                                        | 이슬람과 무슬림을 한국 문화에 동화되기 어렵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집단으로 인식함 |
| 경제적 부담     | 돈 1,214회, 지원 878회, 세금 585회, 일자리 260회, 부담 66회                                                      | 난민 지원을 자국민의 복지·세금·일자리와 경쟁하는 비용으로 인식함                 |
| 비인간화       | 쓰레기 107회, 거지 87회, 기생충 9회, 바퀴벌레 7회                                                                 | 난민과 이주민을 오염·번식·기생의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인간 이하의 존재로 낮춤          |
| 인도주의·연대    | 인권 818회, 도움 468회, 보호 392회, 평화 330회, 응원 298회, 사랑 291회, 찬성 273회, 후원 267회, 공감 216회, 환영 156회, 연대 110회 | 난민의 인권과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한국 사회의 국제적 책임과 연대를 요청함         |

<sup>35</sup> 키워드 출현 빈도는 영상 관련 텍스트와 댓글에서 해당 명사가 나타난 총 횟수이다. 분석 시 동일한 키워드도 사용된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빈도와 함께 원문의 발화 맥락을 검토하여 해석하는 과정을 포함했다.

<sup>32</sup> 위의 책, 69쪽.

<sup>33</sup> 위의 책, 63쪽.

<sup>34</sup> 위의 책, 38쪽.

### 3.2.1. 위협·범죄화 및 거부·배제 담론

유튜브의 난민 관련 텍스트에서는 난민을 위협과 위협의 대상으로 구성하는 표현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추방’은 1,242회, ‘범죄’는 827회, ‘테러’는 441회, ‘위협’은 374회, ‘가짜’는 278회 출현하였으며, ‘반대’ 839회, ‘불법’ 561회, ‘거부’ 276회 등 거부와 배제에 관한 표현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키워드가 포함된 텍스트 원문을 확인해 본 결과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나 테러의 위협을 지닌 집단으로 규정하거나, 난민과 불법체류자를 동일시하고 추방을 요구하는 발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표현은 난민의 개별적인 이동 배경이나 박해 경험보다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동시에 ‘범죄’, ‘반대’, ‘혐오’ 등의 단어는 난민을 범죄화하는 발화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식을 비판하는 발화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태도의 크기로 단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난민을 대상으로 위협과 범죄, 추방과 불법의 언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안전과 통제의 문제가 난민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2.2. 종교·문화적 타자화와 경제적 부담·비인간화 담론

종교와 문화 범주의 키워드에서는 ‘이슬람’이 1,800회, ‘종교’가 1,058회, ‘문화’가 1,055회, ‘무슬림’이 903회 출현하였다. 키워드가 포함된 원문 텍스트에서는 이슬람과 무슬림을 한국 사회의 문화와 규범에 적응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규정하거나, 높은 출산율과 종교적 확산을 통해 기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하는 발화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화에서는 난민 개인의 서로 다른 국적과 이주 배경, 삶의 경험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난민이 ‘이슬람’ 또는 ‘무슬림’이라는 단일한 종교·문화 집단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 범주와 관련해서는 ‘돈’이 1,214회, ‘지원’이 878회, ‘세금’이 585회, ‘일자리’가 260회 출현하였다. 일부 댓글은 난민 지원을 자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와 세금이 외부 집단에 배분되는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난민 수용을 자국민의 생존과 경쟁하는 비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쓰레기’ 107회, ‘거지’ 87회, ‘기생충’ 9회, ‘바퀴벌레’ 7회 등 인간 집단을 오염이나 기생, 번식의 이미지와 연결하는 표현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출현 빈도 자체는 높지 않지만, 난민과 이주민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낮추고 배제를 정당화하는 비인간화의 언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6</sup>

### 3.2.3. 인도주의 연대와 대항 담론

난민 관련 담론 키워드에서 긍정적인 언어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인권’은 818회, ‘도움’은 468회, ‘보호’는 392회, ‘평화’는 330회, ‘응원’은 298회, ‘사랑’은 291회, ‘후원’은 267회, ‘공감’은 216회, ‘환영’은 156회, ‘연대’는 110회 출현하였다.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원문을 살펴보면 난민을 전쟁과 박해를 피해 이동한 존재로 이해하고, 한국도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난민 보호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발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나아가 난민을 범죄자나 사회적 부담으로 일관화하는 인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인의 삶과 이동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표현 역시 긍정적인 하나의 의미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보호’는 난민 보호를 주장하는 문맥뿐만 아니라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맥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지원’과 ‘인권’도 난민 정책을 비판하는 발화에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상의 담론이 난민에 대한 혐오와 배제만이 아

<sup>36</sup> ‘쓰레기’와 같은 표현은 난민을 비하하는 맥락뿐만 아니라 난민을 향한 혐오 발언이나 그 발화자를 비판하는 맥락에서도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위의 키워드 빈도에 포함하지 않았다.

나라, 그러한 인식에 대응하여 인권과 책임, 공감과 연대를 제안하는 발화가 함께 나타나는 담론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표 2〉 유튜브 난민 담론의 대표 댓글 사례와 해석<sup>37</sup>

| 담론 범주      | 대표 댓글 내용                                       | 담론적 의미                             |
|------------|------------------------------------------------|------------------------------------|
| 위협·범죄화     |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래를 위해 추방해야 한다.”(C1)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협 가능성을 근거로 추방을 정당화함    |
| 거부·배제      | “난민이 아니라 불법 입국을 하려는 범죄자들이다.”(C2)               | 난민·불법 입국자·범죄자를 하나의 범주로 연결함         |
| 종교·문화적 타자화 | “문제는 그들이 무슬림이라는 점이다. 우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다.”(C3)     | 개인의 차이를 지우고 종교적 정체성을 위해 판단의 근거로 삼음 |
| 경제적 부담     | “자국민도 어려운데 난민을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C4)             | 난민 지원을 자국민 복지와 경쟁하는 비용으로 인식함       |
| 비인간화       | “이미 들어와 바퀴벌레처럼 번식하고 있다.”(C5)                   | 난민과 이주민을 해충과 번식의 이미지로 환원함          |
| 범죄화비판      |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것은 선입견이다.”(C6)    | 난민과 범죄를 연결하는 일반화에 이의를 제기함          |
| 인도주의·연대    | “한국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책임이 있다.”(C7) | 난민 보호를 한국 사회의 국제적 책임으로 인식함         |
| 관계적 연대     | “도움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연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C8)     | 난민을 일방적 동정의 대상이 아닌 연대의 주체로 인식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미디어 상의 난민 담론은 난민을 둘러싼 공포와 불안, 연민과 책임, 거부와 연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위협·범죄화, 종교·문화적 타자화,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표현이 두드러지게 반복적으로 가시화된다는 점은 난민을 논의하는 언어가 안전과 통제, 비용의 논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미디어 상의 담론은 개별 이용자의 의견이 단순히 모인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 영상의 제목과 내용, 댓글, 알고리즘, 이용자 반응 및 플랫폼의 배열 구조는 특정한 표현과 감정이 반복적으로 축적되고 가시화되는

환경을 구성한다.

미디어 상에 나타난 난민 혐오 발언은 개별 이용자의 감정이나 편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버틀러(Butler, 1997/2016)는 마쓰다(Matsuda, 1989)의 논의를 바탕으로 혐오 발언의 힘이 발화자의 개인적 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배제해 온 사회적 규범과 권력관계의 반복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sup>38</sup> 이러한 관점에서 ‘가짜 난민’, ‘불법’, ‘범죄’, ‘추방’ 등의 표현은 개별 댓글에 머무르지 않고, 언론 보도와 행정적 분류, 온라인 담론 속에서 반복되면서 난민을 의심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언어적 환경을 구성한다. 또한 댓글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이용자, 특정한 표현과 이미지를 선택하는 콘텐츠 생산자, 난민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설계·운영하는 인간 행위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지닌다. 따라서 난민 담론 또한 인간의 편견 또는 기술의 문제 중 하나로 환원하기보다, 인간과 언어, 제도, 미디어 기술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난민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나 제도 개선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적 과제로도 이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난민에 대한 인식은 제도와 언론, 디지털 플랫폼 및 일상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난민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난민을 둘러싼 언어와 이미지, 감정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생산되고 반복되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성찰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sup>37</sup> 댓글 작성자의 계정명과 개인 식별 정보는 삭제하였다. 대표 댓글은 원문의 핵심 의미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댓글에는 임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였다.

<sup>38</sup> Butler, J., 유민석 역, 『혐오 발언』, 알렘, 2016, 315쪽; Matsuda, M. J., “Public Response to Racist Speech: Considering the Victim’s Story”, *Michigan Law Review* 87(8), 1989, pp.2320~2381.



## 4. 비판적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본 세계시민교육의 재사유

### 4.1. 인간중심적 세계시민교육의 한계와 관계적 시민성

난민 문제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모색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에 주목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인권과 평화, 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시민성을 지향해 왔다. 또한 이주·인권·불평등과 같은 지구적 문제를 교육의 의제로 삼으며, 난민 문제를 교육적으로 다루는 대표적인 틀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인도주의와 보편적 인간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부 세계시민교육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 주체를 교육의 중심에 놓고, 난민을 그러한 주체가 이해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시민교육 전반을 인간중심적 교육으로 일괄 규정하기보다는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흐름을 인정하되, 난민을 재현하는 방식과 그 이면에 전제된 시민 주체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이 강조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는 국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이 구체적인 차이와 불평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경우, 특정한 인간상을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주체로 상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계시민이 이성적이고 자율적이며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체로 상정될 때,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거나 시민권의 경계에 있는 난민은 세계시민교육의 주체보다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나 사례로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난민 문제는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선언을 넘어, 누가 시민으로 인정되고 어떤 존재의 삶과 목소리가 교육에서 가치를 부여받는지를 질문하게 한다.

이러한 한계는 세계시민교육에서 반복되는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구도를 통해 나타난다. 인도주의적 접근에서 학습자는 난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도덕적 주체로, 난민은 연민과 보호가 필요한 수동적 타자로 위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도는 난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학습자와 난민 사이의 권력 차이를 충분히 성찰하지 못할 경우 기존의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안드레오티(Andreotti, 2011)는 이러한 접근을 ‘소프트한 세계시민교육(soft GCE)’으로 설명하며, 타자에 대한 연민이나 원조만으로는 불평등을 만들어낸 역사적·정치적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sup>39</sup> 따라서 난민 교육은 학습자가 난민에게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사회와 제도가 난민을 어떠한 위치에 놓고 있는지를 성찰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일부 교육자료에서 난민은 전쟁과 분쟁, 세계화와 인권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제시된다. 이와 같은 정보 중심의 접근은 난민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지만, 난민의 구체적인 삶과 정동적 경험, 주체적인 목소리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는 난민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머무르고, 난민은 설명되고 관찰되는 대상으로 고정된다.

난민은 국민과 비국민, 시민과 비시민, 보호받는 자와 심사받는 자를 구분하는 경계에 놓여 있다. 난민은 제도의 완전한 외부에 존재하기보다, 제도 안에서 심사와 관리의 대상이 되면서도 시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소속에서는 배제되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다. 어떤 생명이 보호하고 애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지는 그 생명 자체의 특성보다 사회적·정치적 프레임을 통해 결

<sup>39</sup> Andreotti, V., *Actionable Postcolonial Theory in Educ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정되는 것이다.<sup>40</sup> 난민이 ‘가짜’, ‘불법’, ‘범죄’, ‘부담’ 등의 언어로 반복하여 호명될 경우, 난민의 구체적인 삶과 고통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이들의 생명은 다른 생명보다 덜 보호해도 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시민권과 국적, 합법과 불법, 보호 대상과 위험 집단의 경계는 고정되거나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계는 법과 제도, 언론과 디지털미디어, 일상적 언어와 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경계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시민과 난민 사이의 차이를 모두 없애거나 서로 다른 존재를 하나의 범주로 통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의 경계가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존재의 권리와 목소리가 배제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시민성은 개인이 소유한 고정된 자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동의 삶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난민은 기존 공동체가 일방적으로 포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시민과 비시민의 구분 및 공동체의 책임을 다시 묻게 하는 주체가 된다. 관계적 윤리 역시 난민에 대한 공감이나 선의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난민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판단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성찰하고, 자신이 제도와 담론의 구조에 연결된 방식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결국 기존의 인간중심적 세계시민교육의 한계는 난민을 동등한 관계의 주체로 인정하기보다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그들’로 위치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난민을 기존 공동체 안으로 포함하는 교육을 넘어, 난민과의 관계를 통해 공동체와 시민성의 경계 자체를 다시 질문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관계적 시민성은 난민을 공동의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학습자가 난민을 둘러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성찰하도록 하는 교육의 기반이 된다.

#### 4.2.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과 세계시민교육의 재사유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을 토대로 세계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근대 인문주의가 전제해 온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인간을 자연과 기술, 사물, 환경 및 다양한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재사유하려는 이론적 흐름이다. 근대 인문주의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상정하고 이를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개념은 실제로 서구와 남성, 이성, 시민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그 기준에서 벗어난 여성과 이주민, 난민 및 비인간 존재를 불완전하거나 주변적인 존재로 배치해 왔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보편적 인간의 범주가 어떠한 존재를 포함하고 배제해 왔는지를 질문하고,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놓는 주체 개념 자체를 재검토한다.<sup>41</sup>

비판적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주체는 고정되고 완결된 개인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성적 존재이다. 인간은 독립적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중심적 주체가 아니라 인간·비인간 존재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세계를 만들어가는 관계적 존재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난민 역시 이미 완성된 국민 공동체 안으로 수용되어야 할 외부의 타자로만 규정될 수 없다. 난민의 존재는 누가 시민으로 인정되는지, 공동체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소속과 권리가 누구에게 부여되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이러

40 Butler, J., 한정라 역, 『전쟁의 프레임들: 삶의 평등한 애도가능성을 향하여』, 한울아카데미, 2023.

41 Braidotti, R., op. cit.

한 의미에서 난민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기존 시민성과 공동체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관계적 주체이자 공동 행위자로 이해될 수 있다.<sup>42</sup>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차이와 갈등이 사라진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비판적 포스트휴먼 윤리는 불편함과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거나 타자를 기존 질서에 동화시키기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를 지속하며 공존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태도에 주목한다. 해러웨이(Haraway, 2016/2021)의 ‘트러블과 함께 머무르기(staying with the trouble)’와 ‘함께-만들기(making-with)’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차이와 갈등을 포함한 관계 속에서 공동의 삶을 구성해 가는 과정을 지지해 준다.<sup>43</sup> 이러한 관점에서 난민 문제는 인도주의적 동정이나 일방적인 포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경과 시민권, 종교와 문화, 권리와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함께 살아갈 조건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윤리적 과제가 된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 주목하는 관계는 인간 사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문서와 공간, 기술과 사물, 데이터와 플랫폼 역시 인간의 행동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구성하고 사건의 전개에 관여한다.<sup>44</sup> 난민 심사에서는 담당자의 판단뿐만 아니라 신청서와 증빙 자료, 통역과 기록, 심사 절차, 송환대기실 및 데이터 입력 시스템이 난민의 경험과 행정적 판단이 형성되는 과정에 참여한다.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도 영상의 제목과 이미지, 댓글, 이용자 반응 및 플랫폼의 배열 구조가 난민에 관한 정보와 감정이 축적되고 가시화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은 난민 문제가 개인의 편견이나 행정제도 중 어느 하나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인간과 언어, 제도, 공간 및 기술이 형성하는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인간을 독립적이고 완결된 주체로 보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이 관계를 맺으며 함께 세계를 구성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생성적 주체, 차이와 갈등을 제거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윤리, 문서와 기술 및 공간이 인간의 경험과 판단에 참여한다는 관점은 서로 분리된 이론이라기보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구성하는 상호 연관된 문제의식으로 볼 수 있다. 관계와 생성의 긍정적 가능성을 강조하는 관점과 갈등 및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관계를 지속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관점 사이에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난민을 둘러싼 관계와 배제, 공존과 책임의 문제를 다각도로 이해하였다.<sup>45</sup>

난민 문제에 있어 비인간 행위자의 작용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행위자에게 동일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와 기술, 공간은 인간의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만, 제도를 설계하고 절차를 운영하며 구체적인 결정을 수행하는 인간 행위자에게는 윤리적·정치적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비판적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설정되는 ‘관계적’ 관점은 책임을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모호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한 결과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밝히고, 제도와 기술의 설계 및 운영에 참여한 인간 행위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기 위한 관점이다.

이러한 관계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감응성(affectivity)’이다. 감응성은 타자의 입장을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그에게 연민을 느끼는 개인의 감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서로 다른 존재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인식과 감정, 행동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감응은

<sup>42</sup> Braidotti, R., op. cit.; Haraway, D., op. cit.

<sup>43</sup> Haraway, D., op. cit.

<sup>44</sup> Adams, C., & Thompson, T. L., 이경미·장인철 역, 『포스트휴먼 세계 연구하기: 디지털 객체와 면담하는 법』, 박영스토리, 2025.

<sup>45</sup> Braidotti, R., op. cit.; Haraway, D., op. cit.; Adams, C., & Thompson, T. L., op. cit.



타자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기존의 의미 체계 안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만남에 반응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인식과 관계를 다시 구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감응적 관계에서 난민은 학습자가 이해하고 도와야 할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식과 위치, 시민성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관계적 주체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은 ‘타자를 이해하는 인간의 도덕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감응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때 세계시민성 역시 제도적 자격이나 도덕적 규범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연결되고 반응하며 함께 변화하는 공존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 4.3. 감응적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방향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감응적 세계시민교육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인식과 감정, 행동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타자와의 만남에 반응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인식과 관계를 다시 구성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학습자가 난민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난민에게 공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난민을 둘러싼 인간·비인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학과 미디어, 디지털 플랫폼, 행정제도와 언어가 난민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형성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학습자가 기존의 경계와 관계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는 교육적 접근을 지향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실천 방향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한다.

##### 4.3.1. 난민 서사를 활용한 경계 재구성

교수자는 학습자가 난민의 서사와 경험을 탐구하면

서 자신과 타자의 경계를 성찰할 수 있도록 서사 기반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안녕, 한국!』과 같은 난민 에세이를 활용하여 난민이 심사와 체류, 취업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제도적·사회적 배제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난민 서사를 학습자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생동적인 사례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난민을 단순한 공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제도적 한계와 차별 구조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지식 생산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는 난민 서사를 읽기 전 자신의 선입견과 감정적 반응을 기록하고, 서사를 읽은 뒤 어떤 인식이 변화했는지를 성찰 저널로 작성해 볼 수 있다. 또한 난민의 진술이 행정 문서나 언론 보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선택되거나 제외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난민을 설명되는 대상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로 인식할 수 있다.

##### 4.3.2. 디지털 플랫폼과 혐오 담론의 비판적 분석

플랫폼과 알고리즘, 영상과 댓글은 학습 과정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립적인 도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동시에, 플랫폼의 구조와 언어가 난민에 대한 인식과 감정의 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상의 혐오 담론 키워드 ‘추방’, ‘범죄’, ‘불법’, ‘세금’, ‘보호’, ‘연대’ 등이 어떠한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난민을 다룬 영상의 제목이나 댓글을 관계적·인권적 관점에서 다시 작성하거나 대안적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기존의 타자화 언어를 비판하고 새로운 서사를 생산해 볼 수 있다.



#### 4.3.3. 감응적 성찰을 중심으로 한 학습 평가

감응적 세계시민교육에서 평가는 난민에 관한 지식의 양이나 정해진 답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성찰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난민 서사를 읽기 전후의 인식 변화를 디지털 저널로 기록하거나, 미디어 상의 혐오 담론 분석 이후 자신이 난민 관련 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소비하고 판단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성찰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평가에서는 난민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정답으로 제시하기보다, 학습자가 자신의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도와 미디어 환경이 그 판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타자의 관점을 임의로 대변하지 않는지,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성찰하는지, 기존 언어를 관계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수자 역시 정답을 전달하는 평가자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자의 반응을 조정하고 질문을 확장하는 공동 학습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감응적 교육을 현장에 적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된다. 먼저 혐오 댓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난민에 대한 편견이 오히려 강화되거나 일부 학습자가 정서적인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수자는 혐오 표현을 단순히 제시하지 않고, 그러한 표현이 형성된 맥락과 권력관계를 함께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정적 댓글과 이를 비판하는 댓글, 인권과 연대의 발화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활동 전후에 토론 규칙과 비식별화 원칙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난민 서사와 성찰 활동에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교수자가 학습자의 상이한 반응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교수자가 공동 학습자로 참여한다는 것은 모든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

거나 교육적 책임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혐오와 차별을 재생산하는 발화에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학습자가 자신의 판단이 형성된 배경을 검토하고 다른 관점과 관계를 형성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따라서 성찰의 깊이, 근거의 구체성, 자신의 위치와 책임에 대한 인식, 대안적 관계를 제안하는 능력 등을 평가 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감응적 세계시민교육은 완성된 교육 모형이라기보다 비판적 포스트휴먼 관점을 실제 교육에 연결하기 위한 실천 방향에 해당한다. 그 효과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인 교육 방안 설계 및 학습자의 인식과 감정, 관계 및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감응적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방향은 난민을 이해와 보호의 대상으로 고정하는 교육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이는 학습자가 난민을 둘러싼 제도와 담론에 자신도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 살아갈 조건을 재구성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난민 문제를 비판적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고찰하고, 인간중심적 세계시민교육의 한계를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 감응적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에세이집 『안녕, 한국!』에 수록된 난민 당사자의 서사와 미디어 상의 난민 관련 유튜브 영상 및 댓글을 분석하고, 난민을 둘러싼 제도와 인간, 언어와 공간, 디지털미디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난민 당사자의 서사에서는 난민 심사 담당자의 판단과 통역, 기록과 문서 양식, 행정 절차와 공간이 난민의 경험과 법적 지위 형성에 복합적으로 관여하

는 양상이 나타났다. 미디어 상의 난민 담론 키워드 분석에서는 위협·범죄화, 거부·배제, 종교·문화적 타자화와 경제적 부담의 언어가 반복되는 한편, 난민의 인권과 보호, 공감과 연대를 강조하는 발화도 함께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난민에 대한 인식과 배제가 개인의 편견이나 제도의 문제 중 하나로 환원될 수 없으며,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형성하는 관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난민을 기존 공동체가 보호하고 포용해야 할 외부 타자의 위치가 아닌 시민과 공동체의 경계 및 책임을 다시 묻게 하는 관계적 주체로 재인식하였다. 비판적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시민성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이 소유하는 고정된 자격이나 역량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개인과 제도, 언어와 기술이 관계를 맺으며 공동의 삶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비판적 포스트휴먼 관점은 기존 세계시민교육이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타자에게 공감하는 도덕적 인간 양성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점을 성찰하며, 그 교육적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난민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확대하는 교육을 넘어, 난민과의 관계를 통해 학습자 자신의 인식과 위치, 감정과 행동이 변화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감응적 세계시민교육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때 난민은 학습자가 이해해야 할 교육적 사례가 아니라, 학습자와 함께 시민성과 공동체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교육적 주체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감응적 세계시민교육의 교육 실천 방향으로 난민 서사를 활용한 경계 재구성, 디지털 플랫폼에서 형성되는 혐오와 연대 담론의 비판적 분석, 학습자의 인식과 정보 소비 방식의 변화를 기록하는 감응적 성찰 활동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감응적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에게 난민 수용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정답으로 요구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이 어떠한 제도적·사회적·기술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성

찰하게 한다. 나아가 학습자가 난민을 둘러싼 관계에 자신도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재구성하도록 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가 제안한 감응적 세계시민교육은 이론과 자료 분석을 토대로 구성한 실천 방향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감응적 세계시민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탐색되기를 기대한다.

감응적 세계시민교육은 완결된 교육 모형이나 하나의 정답이라기보다, 난민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교육적 태도에 중점을 둔다. 난민과 함께 ‘트러블 속에 머물며’ 공동의 삶을 구성할 조건을 모색하는 과정은 비판적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세계시민성을 재구성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김영환·김선정, 「국내 세계시민교육 연구 동향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교육』 11(1),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2026.
- 김지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경험」, 『교육문화연구』 31(3),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5.
- 김진희, 「Post 2015 맥락의 세계시민교육 담론 동향과 쟁점 분석」, 『시민교육연구』 47(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5.
- 난민인권센터, 『안녕, 한국!: 한국거주 난민 에세이집』, 난민인권센터, 2018.
- 박순용, 「난민문제를 통해서 본 세계시민교육의 과제에 대한 고찰」,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15.
- 백일순, 「이동통치의 관점에서 본 난민 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 역사 지리』 34(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22.
- 송원섭, 「순진한 도덕적 호소 너머의 세계시민교육: 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개념 기반에 따른 지리교육의 방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4), 한국지역지리학회, 2025.
- 신예원·마동훈, 「국내 미디어에 재현된 '예멘 난민'의 양면」, 『미디어 경제와 문화』 17(2), SBS, 2019.
- 신자원, 「'이주-비호의 연계성' 담론과 난민보호 위기에 관한 정책적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 15(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 이정우, 「사회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제6차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6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7.
- 이채영, 「국내 난민교육 이슈 분석과 난민 정책적 시사점 탐색」, 『다문화사회연구』 17(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4.
- 임보미·김치정, 「난민 정책과 난민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사회와 문화』 14(3),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24.
- 정윤경, 「교육학의 포스트휴머니즘 수용과 포스트휴먼 감응교육 탐색」, 『교육철학연구』 42(4), 한국교육철학학회, 2020.
- 주재원·임이삭, 「매개된 배타적 담론과 혐오적 공론장의 재생산」, 『지역과 세계』 46(1),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2.
- 허수미, 「세계시민교육으로서 사회과교육의 역할과 수업개선 방안」, 『사회과수업연구』 6(2),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18.
- 허창수, 「비판적 포스트휴먼과 브리콜라주 텍스트로서 한국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운영 방향 논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2), 한국콘텐츠학회, 2024.

Adams, C., & Thompson, T. L., 이경미·장인철 역, 『포스트휴먼 세계 연구하기: 디지털 객체와 면담하는 법』, 박영스토리, 2025.

Andreotti, V., *Actionable postcolonial theory in education*, Palgrave Macmillan, 2011.

Braidotti, R.,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가넷, 2015.

Butler, J., 한정라 역, 『전쟁의 프레임들: 삶의 평등한 애도가능성을 향하여』, 한울아카데미, 2023.

\_\_\_\_\_, 유민석 역, 『혐오 발언』, 알렙, 2023.

Haraway, D.,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Matsuda, M. J., "Public response to racist speech: Considering the victim's story", *Michigan Law Review* 77(8), 1989.

## 2. 기타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1994~2024), 2024.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년, 2024년 난민 신청 및 심사 현황, 2024.

<https://www.moj.go.kr/moj/2417/subview.do>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2024.12.31일 기준).

<https://www.moj.go.kr/moj/2417/subview.do>

이민정책연구원(MRTC), South Korea's refugee policy and implementation since the 2013 Refugee Act (Publication No. 2017-17), 2017.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집회 관련 보도, 『제주매일』, 2018.6.18.

UNHCR, Global trends report 2024. <https://www.unhcr.org/global-trends-report-2024>, 2024.



---

**Abstract****Korean Refugee Narratives and Discourse from a  
Critical Posthumanist Perspective**

Toward Affectiv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hun, Soo-Yeon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fugee issue in South Korea from a critical posthuman perspective, reviews the limitations of anthropocentric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xplores the direction of affectiv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s an alternative. To this end, it analyzes the narratives of refugees presented in Hello, Korea! (Refugee Rights Center, 2018) as well as refugee-related YouTube videos and comments posted between 2018 and 2025. The findings reveal that refugee narratives position refugees as objects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through the complex interplay of human and non-human actors, including administrative documents, interpretation, and spatial control. In addition, YouTube discourse repeatedly represents refugees as threats or criminals and reinforces narratives of rejection and exclusion, religious and cultural othering, and economic burden, while counter-discourses emphasizing human rights and solidarity also emerg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rgues that transforming social perceptions of refugees and broadening educational approaches require an affective model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at enables learners to recognize the institutional and discursive conditions surrounding refugees and to reflect on their own positionality and responsibility within these relational networks. To support this educational framework, the study proposes reconstructing boundaries through refugee narratives, critically analyzing hate discourse, and implementing reflective assessment centered on affective engagement.

**Keywords** Refugees, Critical posthumanism,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ffective education, Nonhuman actors, Relational citizenship, Othering

---

이 논문은 2026년 7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8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